

2024 지역의 통일교육 쟁점과 확산 방안 학술세미나

주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지역 통일교육 확산 방안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3:00~18:00

장소 국립부경대학교 동원장보고관 3층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경남통일교육센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2024 지역의 통일교육 쟁점과 확산 방안 학술 세미나

주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지역 통일교육 확산 방안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3:00~18:00
장소 국립부경대학교 동원장보고관 3층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3:00~13:30	등 록	
13:30~13:45	환영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축사: 이기완 (국립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장, 경남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축사: 장보권 (부산여대,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장)	개회식
제 1 세션 13:45~15:30	주제: 글로벌 안보 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사회: 김범수 (서울대) 발표: 정한범 (국방대):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김태원 (통일연구원): 북한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이기완 (국립창원대):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제고 토론: 문기홍 (국립부경대), 홍석훈 (국립창원대), 여현철 (국민대), 황기식 (동아대)	
15:30~16:00	Coffee Break	
제 2 세션 16:00~17:45	주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사회: 최희규 (국립창원대) 토론: 장보권 (부산여대), 이상빈 (국립창원대), 박상영 (한국교원대),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정은정 (동아대),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병훈 (국립창원대)	라운드 테이블
17:45~18:00	폐 회	

주 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경남통일교육센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CONTENTS



제1세션 |

발표1.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3
정한범(국방대학교)	
발표2. 북한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14
김태원 (통일연구원)	
발표3.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제고	23
이기완(국립창원대학교)	
[토론문]	43
김범수(서울대학교), 문기홍 (국립부경대학교),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여현철 (국민대학교), 황기식 (동아대학교)	

제2세션 |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59
최희규(국립창원대학교), 장보권 (부산여자대학교), 이상빈 (국립창원대학교), 박상영 (한국교원대학교),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정은정 (동아대학교),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병훈 (국립창원대학교)	

제 1 세션

발표1.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정한범(국방대학교)

발표2. 북한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김태원 (통일연구원)

발표3.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제고
이기완(국립창원대학교)

.....

[토론문]

문기홍 (국립부경대학교)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여현철 (국민대학교)

황기식 (동아대학교)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정한범(국방대학교)

“올해 최대의 위협은 ‘자신과 싸우는 미국’”

전례 없이 문제가 많은 미국 선거가 세계의 안보, 안정, 경제 전망에 그 어느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

미국 대선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이 지난 150년간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민주주의를 시험하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약화할 것.

미국의 대선이 세계 80억 인구의 운명을 결정하겠지만, 오직 1억 6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투표하며, 특히 고작 몇 개 경합주에 있는 유권자들이 승자를 결정.

-- 유라시아 그룹 (정치위험 분석업체)

1. 2024 미국 대선의 향방

가. 개요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향후 미중관계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속 군소정당 후보 가세.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presidential primaries) 초반에 두 후보 대세론 형성.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2023년 6월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선거 캠페인에 돌입.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돌풍을 잠재우고 사실상 후보로 선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의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를 토대로 당내 대선 후보 토론회에 불참,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 경합주 (battleground states) 유세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트럼프 vs. 바이든’의 재대결을 기정사실화.

나. 당내 경선 경과와 현재 상황

(표 1)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 일정 (50개 주 & 워싱턴 D.C.)

날짜	주(State)
1월 15일	아이오와
1월 23일	뉴햄프셔
2월 6일	네바다
2월 2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2월 27일	미시간
3월 2일	아이다호, 미주리
3월 3일	워싱턴 D.C.
3월 4일	노스 다코타
3월 5일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알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유타, 버지니아
3월 12일	조지아, 하와이, 미시시피, 워싱턴
3월 19일	메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자스, 오하이오
3월 23일	루이지애나
4월 2일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욕,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4월 18-20일	와यो밍
4월 23일	펜실베이니아
5월 7일	인디애나
5월 14일	메릴랜드, 네브라스카, 웨스트 버지니아
5월 21일	캔터키, 오리건
6월 4일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사우스 다코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프라이머리(primary)와 코커스(caucus).

대선 후보 확정은 전당대회(national party convention)에서 대의원들(delegates).

대개 남부 표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와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

경선 초기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대세에 영향.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경선 초기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변을 일으키지 못함.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초반부터 사실상 확정.

선거 결과가 레이스 초반에 사실상 확정되며 본선 레이스 국면으로 전환 예상.

다. 대통령 선거 본선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 Vote)를 통한 간접선거.

2024년 11월 5일 유권자 투표 결과에 따라 12월 17일에 선거인단 투표를 각 주에서 실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득표 당선.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U.S. Census) 결과를 바탕으로 할당되는 선거인단 수는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워싱턴 D.C.에 할당된 선거인단(3명)을 합친 것.

텍사스(Texas)주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많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어 선거인단 수가 38명에서 40명으로 증가.

48개 주와 워싱턴 D.C.가 승자독식제 (winner-take-all system).

네브래스카주(5)와 메인주(4)는 주 권역&하원 의원 선거구 승자독식제 (statewide & congressional district winner-take-all system), 2명의 선거인단은 주 권역 승자에게, 각 하원 의원 선거구별 승자에게 1명의 선거인단을 할당.

라. 2024년 미국 대선 변수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상황이 바로미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국정 운영 지지율.

취임 직후 56%에서 점점 감소하여 2024년 5월 현재 40% 내외.

11월 26일 발표된 갤럽 조사 지지율이 37%로 역대 최저치.

취임 후 1,000일째 기준 지미 카터(33.0%) 전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수치.

경제 지표 개선으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 성과에 대한 인정은 부진.

2023년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

미국 경제는 2023년 1분기 2.0%, 2분기 2.1%, 3분기 4.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실업률은 2월 3.4%, 4월 3.5%, 7월 3.6%, 9월 3.8%, 11월 3.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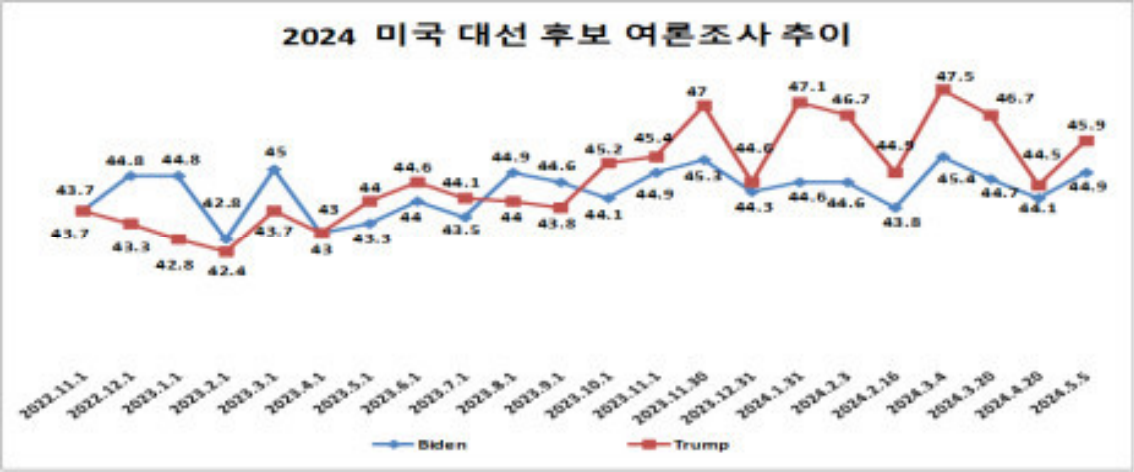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1월 6.4%에서 6월 3.0%, 7월 3.2%, 9월 3.7%로 인플레이션 개선.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간 1,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 성과.

미국 유권자들의 체감 경기는 다른 양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여파 지속.

2024년 대선 판세는 내년 상반기 미국 내 경제 상황의 온기 확산이 좌우.
올해 상반기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개선
될 수 있느냐가 관건.
인플레이션 상황변화를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상승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
하반기가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 예상.



마.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통상 현직 대통령이 선거 자원 활용, 대선 자금 모금 능력 등에 있어 우위, 유리한 선거 환경.
이번 대선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로 현직 이점은 반감.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주(state) 별 예측은 민주당이 다소 우세.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연구소(University of Virginia Center for Politics)
2023년 6월 29일 현재 공화당은 26개 주에서 235표의 선거인단을 획득, 민주당은 21개 주
와 워싱턴 D.C.에서 260표의 선거인단을 확보.
주요 경합 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4개 경합 주(toss-up states)에는 46표의 선거인단.

주요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지지층의 결집 및 동원과 무당파의 표심 향방이 결정.

2. 양 당 주요 후보 대외정책 전망

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

“Let’s Finish the Job!”

2기 새로운 정책보다는 1기 정책 성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 완료에 역점.

‘미국 리더십의 복원’ 목표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속 민주적 가치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고 외교를 재활성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하여 자유, 인권, 법에 의한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및 민주주의를 수호.

신기술, 보건, 사이버 공간, 우주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민주 진영의 국제 규범, 표준 및 제도 구축.

태평양 국가로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는 번영, 안보, 가치를 위해 협력.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인도네시아 등 파트너 국가들.

아세안과 같은 지역 다자 기구에 대한 강력한 개입 정책을 소생.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지속적 노력.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대응.

(소)다자 협력 증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포괄적 협의체 대신 무역, 기술, 공급망, 국제 표준 등 사안별로 유연하고 임의적 대응.

다양한 양자(bilateral) 및 소다자(minilateral)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 기본 틀/framework).

한미일 3자 협력, 오키우스(AUKUS), 칩4(CHIP4) 등을 통해 사안별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EF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제도화.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국제표준 관련 협력.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 중국의 부상을 견제.

경제 안보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 2021년 3월)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명시.

미국의 통상정책 및 국제 경제 정책은 미국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새롭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인상시키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천명. 다른 나라들과 협상 시 미국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대변, 노동·환경단체를 협상에 참여, 모든 경제 협정이 노동 및 환경 보호에 기여.

중산층이 국가적 성공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를 하는 동시에 국제경제의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언급.

첨단 제조업 생산 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체화.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의 제정.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과 첨단 제조업 생산 시설의 미국 내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1천만 건 이상의 신규 소기업 창업

'메이크 인 아메리카(Make in America)',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재선 캠페인

상향식(bottom-up) 경제를 경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는 경제비전.

'투자, 교육, 경쟁'의 세 가지 주요 기둥(three key pillars).

미국에 대한 현명한 공공 투자로 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

공공 투자는 인프라 개선, 반도체, 청정에너지, 기후 안보 등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의 중심이 되는 분야에 집중.

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2기 행정부'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1기의 경험을 토대로 주요 정책 성과를 달성.

'미국우선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의 재활성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지위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

국제무대에서 축소(retrenchment)와 자제(restraint)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미국을 재건.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기여를 증대. 미국우선주의 외교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유지·강화.

미국의 전략적 목표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미국 본토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시.

불필요한 국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증대.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견제.

국방예산 자동 삭감조치 폐지, 군대의 재건, 힘을 통한 평화 등을 강조.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하여 동맹국들의 기여를 증대, 기존의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미국우선주의

군사안보분야 ‘안보무임승차론’

가난한 미국이 부유한 서방,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들을 지켜주기 위해 과도한 지출.

기존 동맹관계의 틀을 재조정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대.

거래 중심적 동맹관은 미국의 동맹 수호 의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증폭.

미국과 동맹국들 간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 분쟁 등 일련의 일방주의적인 행보.

다자주의적 협의체 구성 등 미국의 역내 동맹 규합 노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이 증폭.

경제통상 분야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

관세, 규제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들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중국 등 경쟁국들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제하여 국내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

‘아시아-태평양’을 대신하여 ‘인도-태평양’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채택하고 아

시아로의 재균형을 지속.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네 가지 원칙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공개적인 투자, 투명한 합의, 연계성(connectivity)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항행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 준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안보보다는 경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외교적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역내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우선대외정책’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외교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 ‘전략적 선택과 집중’, ‘거래 중심적 동맹관’의 공세적 외교. 통상 분야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핵심.

안보·군사정책 관련 캠페인 슬로건 ‘미국의 힘과 리더십의 갱신 (Renew American Strength and Leadership)’

모든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의 불개입.

외교정책 관련 캠페인 슬로건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 (Reject Globalism and Embrace Patriotism)’

미국우선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복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협상 전망.

우크라이나로 보낸 비축 물품 복구비용을 유럽에게 보상 요청 가능성.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거의 2천억 달러를 지출한 반면 유럽은 그 금액의 극히 일부를 지출.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한 NATO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 지속.

통상정책 관련 캠페인 슬로건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 (Fair Trade for the

American Worker)'

필수 의료 및 국가 안보 물품을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4-year national reshoring plan)을 시행하고 미국의 모든 중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 소유를 금지.

관세 계획은 세계 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미국을 강하게 만들 새로운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Strategic National Manufacturing Initiative)의 핵심(linchpin).

국내 생산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 시스템.

외국 생산자들에게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 가계 소득, GDP 및 미국 내 제조업 생산량을 늘리며,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

미국 산업보호 위해 '트럼프호혜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추진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높은 경우 해당 국가의 물품에 동일한 호혜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 창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폐기

'TPP 2'라고 지칭하며 IPEF를 폐기할 것이며, 세금 감면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근간으로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근본적으로 개편.

미국우선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공급망을 복원하고, 미국 산업을 강하게 만들며, 미국 경제를 재활성화.

에너지 안보 관련 캠페인 슬로건 '에너지 지배력의 발휘 (Unleash Energy Dominance)'

미국 내 에너지 자원 생산의 족쇄를 풀고,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고 전 세계에 걸쳐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며 외국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에서 탈피 추진.

바이든의 그린 뉴딜을 제거하고, 전기차 전환 정책을 종식, 파리 협약에서 재탈퇴.
화석연료와 친환경 에너지 모두에 대한 미국 내 투자생산을 확충하여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

재생 에너지 등 특정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 에너지의 혁신을 가속하며, 석유, 천연가스 등 미국 내 시추를 허용.

3. 양 당 주요 후보의 중국 정책 전망

가. 바이든의 중국 정책

중국을 미국 안보에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계승. 전략적 경쟁의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지연 혹은 억제시켜 미국의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 방법적인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결집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 추구.

역내 안보협력 강화, 군사 혁신 및 군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 부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역외 국가들의 역내 진입.

군사·안보 분야 대만,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견제와 갈등.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둘러싼 ‘경쟁’ (“small yard, high fence”).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 지속.

기후변화, 비확산,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 실용적(result-oriented) 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 지능, 핵심 광물, 의약품 등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 중국의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를 차단 혹은 지연.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제.

중·장기적인 경쟁에 대비.

더리스킹 (derisking).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지속하되,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관련 중국발(發)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이중용도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 품목 및 분야에서 탄력적인 공급.을 확보.

▲국내 핵심 분야 원천산업에 투자하여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을 확충.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달지 않도록 관리.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 보호 및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경제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투자 심사 강화 등이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

나. 트럼프의 중국 정책

대중국 견제 정책

중국 견제 정책이 임기 동안 경제·통상, 군사·안보, 인권, 정치 등 제반 분야로 확산.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협상을 진행.
대중 무역수지 적자 감소 및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중국에 대한 입장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반하는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현상변경 국가’
‘주변 국가들을 억압하는 현상 타파국이며 역내 최대의 안보 위협국’으로 규정.
역내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을 압박.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모호한 입장 표명 및 대만 무기 판매 승인 등을 통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

미국 연방 의회도 ‘대만 여행법 (Taiwan Travel Act)’, ‘아시안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2019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 등을 통과시키며 중국 압박에 동참.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 공산당 정부를 비판.

공세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

보다 강력해진 ‘미국우선 통상 정책 2.0’.

비즈니스, 금융, 학계, 기술, 미디어 분야 및 심지어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중국 스파이 주장.

중국의 정보작전을 미국 밖으로 몰아내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미국 내 중국 자산을 포기하도록 강제.

중국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ade status) 철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4-year national reshoring plan)을 채택.

중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 제한 조치를 우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 포함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국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

중국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기업에 대한 연방계약을 금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되찾고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금 부상.

북한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김태원(통일연구원)

I. 글로벌 안보 위기와 북한인권 문제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엔(UN)의 설립과 함께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2022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오늘날 그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형국임
 -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인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 영토보전 원칙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질서의 혼란은 코로나 사태, 기후위기,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난민 문제, 민족주의 및 권위주의 부활 등과 결합하며 현재 복합위기를 초래함
 - 이에 더해 2023.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보다는 자유주의 진영 대(對) 권위주의 진영 간의 소위 신(新)냉전과 같은 상황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일각에서는 북한과 하마스 간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기조 하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
 - 글로벌 안보가 다중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는 지향하는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함으로써 우리의 세부 전략을 구체화해야 함
 -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주요 가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범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온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의 발전적 재편을 추구해야 할 것임
 - 북한인권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엔은 물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가치 공유국, 즉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과의 연대 및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핵심 과제임

II.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전환: 책임규명(accountability)

-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 관련해 2003년 이래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¹⁾ 등 실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consensus; 표결 없이 합의)²⁾로 채택된 결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OI)의 등장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전환점을 맞이함
- COI는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372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발간,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인권 침해 행위에 있어 가장 책임 있는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혹은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 특별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 강제복송 관련해 방조 혐의로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³⁾
 - 동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개혁 실행, △공정한 재판권과 수감자 처우 개선, △종교의 자유 인정, △식량권 보장, △이동의 자유, △납북 실종자 가족 및 출신국에 생사 및 소재 관련 정보의 제공, △다양한 형태의 차별 철폐, △반인도 범죄 혐의자들의 기소, △권고사항 이행에 도움 줄 수 있는 국제사회 지원 수락 등 19가지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담고 있음
- COI는 유엔 공식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인권침해’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범죄)’를 확인, 국제사회에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름
 -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를 받는 2014년 COI 보고서 발간 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 국제인권법 등 국제기준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음
 - 또한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노력하는 등 종합적 모니터링(monitoring)과 책임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 왔음
-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중심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2004), COI 설립(2013) 및 COI 보고서 발간(2014),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설치(2015) 등 북한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책임자들 처벌 구성을 위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결과를 낳음

1)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 개편 전까지 활동했던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UN Doc. E/CN.4/RES/2004/13)에 따라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며 시작, 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각각 제출한다.

2) 컨센서스(consensus)는 모든 참여국이 명시적 찬성을 표시하는 ‘만장일치(unanimity)’와는 다르지만 다자회의에서 명분이 뚜렷한 사안에 적용되는 대표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3) UN Doc. A/HRC/25/CRP.1.

- 올해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는 시기로 오는 6월 의장국을 수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에는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도 예정되어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와 가치외교 추구 기조 하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발간 등 ‘북한인권’을 대북·통일정책의 본질로 다루고 있음
- 최근에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지난 1월 23일 중국의 제4차 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행보를 보임
-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해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인권 존중을 위한 개혁 절차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산하며 공세적 행보를 취하고 있음
- 한편,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2023.12월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계기로 『백서』를 처음 발표하였는데, 이는 책임규명 중심의 국제사회 대북인권 압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임⁴⁾

Ⅲ. 북한인권 실태 및 전망: COI 권고사항 미이행

- 2014년 당시 COI 보고서에서 ‘동시대 그 어느 곳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고 평가되었던 북한인권 상황은 1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의 수준이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 침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COI 보고서조차 접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숙고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⁵⁾
- 오늘날 COI 보고서 상의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은 대부분 미(未)이행 되고 있으며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각종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이제 COI 보고서의 권고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최대한 많은 옵션을 검토할 시점임
-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은 다음의 주요 실태를 중심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 첫째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형’ 관련 규정들이 확대되었음
 - 2015년 북한 형법이 8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것에 비해, 2022년 개정 형법은 11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음
 -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외에 마약범죄방지법(2021)과 비상방역법(2022)에서도 법규 자체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4) 김수암,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 KINU Online Series, CO 23-41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1

5) 이규창·김태원,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KINU Online Series, CO 24-15 (서울: 통일연구원, 2024) pp.1-3.

-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규정과 달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된 것으로 전해짐⁶⁾
- 둘째, 북한에서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음
 - 북한은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 혁명사적사업법(2021) 등 유일영도체계 유지 및 계승을 위한 주민사상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였음
 - 또한 성경을 소지하거나 무리를 지어 기도하는 경우에 단속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⁷⁾
 - 최근들어 사상·정보 통제가 북한 내부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2020년 전후로 사상통제와 정보통제 목적의 여러 법규가 연이어 제정, 북한은 군중신고법(2019) 제정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제·개정한 배경에 대해 사상과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음⁸⁾
- 셋째, 북한 내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른 인권 침해 등 평등권 침해도 이어짐
 - 간부 등용, 입당, 대한 진학, 직장 배치 및 승진, 거주지 배치 등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속 중임
 - 직장 배치의 경우, 최근 대학 졸업장이 또 다른 중요 요소로 등장했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됨에 따라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임
 - 김정은 집권 이후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격차까지 가중되면서 차별과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 중임⁹⁾
- 넷째,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식량 증산을 위한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등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농업 증산 및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임
 - 식량 배급의 경우, 사회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 간에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확산 중임¹⁰⁾
- 한편, 북한은 COI의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등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신이 가입한 인권조약들의 자발적 국가별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절차에는 나름 참여하는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함¹¹⁾

6)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57-82.

7) 「북한인권보고서」 (서울: 통일부, 2023) pp.183-185.

8) 이규창, “국경 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 침해”, KINU Online Series, CO 23-26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2.

9) 「북한인권보고서」 (서울: 통일부, 2023) pp.31-32

10) 「북한인권보고서」 (서울: 통일부, 2023) pp.238-253

- 유엔 인권이사회 UPR 절차에서 1차~3차 진행되는 동안 점차 권고 수용률이 증가하는 등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제를 중심으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일정 정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받는 지점이기도 함
- 장애인 권리 보호 관련한 북한 법규인 장애인보호법(2003)은 2013.11월 수정보충되었고, 이후 2023.9월 장애인권리보장법(2023)이 채택됨¹²⁾
- 북한은 구타행위방지법(2021) 등 내부적으로 인권법규도 제정하였는데 제정 배경에는 구타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목적 외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도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COI 보고서 발간 이후 공개처형이 감소되었다는 증언들이 일부 수집되기도 함¹³⁾

IV. 인권 가치에 기반한 북한인권정책의 필요성

-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가치와 규범 중심으로 경쟁을 이어감에 따라 점차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개별국가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분명한 가치 정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받고 있음
 - 한국도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건,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가 된 것임
 -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기존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선진국(developed-advanced country) 그룹으로 변경¹⁴⁾, 이는 1964년 UNCTAD의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에 해당함
 - 이처럼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는 2022.5월 출범한 이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¹⁵⁾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가치는 향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동력이자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오늘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최근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11)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이며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12) 『조선중앙통신』, 2023.9.28.

13) 다만,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62-63

14)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598 (검색일: 2024.5.8.)

15) <https://www.president.go.kr/affairs/vision> (검색일: 2024.5.8.)

- 미·중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소모전 상황이 되 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이 유럽의 분쟁에 간접 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이는 한반도 위기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자유민주주의 가 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할 것 임을 다시금 깨닫게 만들고 있음
 - 지금처럼 전통·비전통 안보를 망라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일수록 우 리는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중추국가 로서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 국제문제에 있어 보편적 가치와 우리 국익의 관점 모두에 부합하도록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오늘날 글로벌 공동체에서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erga omnes*) 로서의 성격을 지닌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다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 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 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수립 시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 관련해 주도 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모색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관련국 간의 공동관심을 이끌어내고, 인권 가치에 기 반해 한반도 통일 담론을 형성해 간다면, 그 자체로서 북한인권 문제와 한반도 통 일 공감대 확산의 주체로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임
- 즉,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주도하 기 위해서는 2014년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포함해 북핵-인권, 남북관 계, 글로벌 복합위기, 평화-안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세밀한 검토를 바탕 으로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북한인권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V. 북한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는 초당적으로 인권의 탈(脫)정치화 컨센서스를 이룸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책임규명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신속히 우리 북한인권법 이행을 정상화하고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인권의 탈정치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참고 사례로는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 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미국 의회 산하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 회(CECC)’등이 가능할 것이며,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시에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관 단체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유엔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우리 재외공관들이 재외 탈북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실질적 고민도 병행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 주요 행위자들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관련해 재조명 계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북한인권 문제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방안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었던 책임규명 방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적극 강구하는 데에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임
 - 북한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간 인권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인권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등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담론의 장에서 일관성 있고 초당적 입장을 유지하며 북한인권 실태, 그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임
 - 북한인권결의, 책임규명, 각종 인권제재 등 북한에서 대(對)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국제사회 인권 실태 개선 전략에 대해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이룰 것인지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중요함¹⁶⁾
 - 일례로, 최근 발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상황이나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과 같은 사안들은 북한과 중국 관련 국제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1월~2025.12월)으로서 인권 가치를 포함한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및 총회를 포함해 제4차 북한 UPR 기간(2024.11월) 등 주요 계기 때마다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동시에, 문안 작성 주도자(pen holder)로서의 역할 수행 노력이 중요함
 - 특히, 의장국은 안보리 회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 운영 등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한국의 의장국 수임 기간(2024.6월)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2024.11월 예정된 북한의 4차 UPR 관련해 내용적으로 충실한 대비를 할 필요가

16) 외교안보연구소, 「유엔외교 독립패널 2022년 보고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국 유엔외교」 (서울: 국립외교원, 2023), pp.33-34.

있으며, 북한이 지난 3차 UPR 회기 시 수용한 권고의 이행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화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북한이 참여 의지를 보인 국제인권레짐을 활용, 국제사회와 민간단체가 해당 분야 관련해 민간 주도의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활용 가능한 주요 국제인권레짐으로는 유엔 인권주제별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제도, 보편적 정례검토(UP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이 해당됨
 - 북한이 참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에서도 향후 관련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포괄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결의 채택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임¹⁷⁾
- 물론,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인권 이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관련 결의안 채택 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결의 관련 주요 특징으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적극 채택된 점을 꼽을 수 있음¹⁸⁾
 - 이러한 결의안 채택 동향을 참고해 오는 6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시리아, 홍콩, 미얀마, 팔레스타인 등 글로벌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욱 진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종합하자면, 북한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 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어려운 특정 사안의 경우 시민단체가 주된 역할을 맡되 이와 관련한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현실적 차원의 접근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대북고위관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북한인권 관련 인사 및 미국 의회 협의체, 국내외 북한인권단체 등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속성 있는 네트워킹 강화가 중요함

17) 이규창,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KINU Online Series, CO22-20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4.

18) 2020~2023년 국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2021),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202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결의안(2021),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결의안(2022) 등이 채택되었다.

- 미국 등과 같은 독자적 북한인권 제재를 도입하는 문제, 최근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적용 관련 유관국들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급함
- 한·미, 한·미·일 등 북한인권 유사 입장국 간 북한인권 협의체 추진과 함께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대감을 가진 유럽 국가들을 활용해 정부 대(對) 정부 차원의 인권외교 활용 등 인권 역량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국제화

이기완(국립창원대학교)

I. 서론

○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중 전략 경쟁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북·러 밀착 및 북·중 협력의 강화와 함께 한일 관계의 개선 및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의 강화 등에 의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적 구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북한은 2019년 2월 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자, 협상을 통한 대미 접근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북한은 2018년에 4월 중단을 선언하였던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2019년에 13회, 2020년 3회, 2021년 11회, 2022년 31회, 2023년 18회에 걸쳐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

○ 최근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러 갈등의 심화 속에서 유엔안보리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북 추가 제재를 논의하였지만, 중·러 양국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무산되었음. 이것은 2016년~2017년 사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6번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더욱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2024년 3월 28일 러시아 반대로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동년 4월 30일부로 해체되었음.¹⁾

○ 북한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8기 제9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만일의 경우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라고 발표하여 대남 적대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정치 환경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환

1) “대북 제재 이행감시의 '저승사자' 안보리 전문가패널 역사속으로,” <https://www.yna.co.kr/view> (검색일: 2024.03.29).

경에 상당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여기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과 통일 준비에 미치는 비우호적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국제적 통일 담론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

II. 국제 정세의 변화와 북·중·러 관계

1. 갈등적 대결의 국제 질서

○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면서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²⁾ 이러한 미·중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안보 협의체 및 동맹 확대까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미·중 상황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과 맞물리면서 한층 복잡해지고 있음. 전자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2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투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찬동하였지만,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북한 등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음. 이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급격히 냉각되었고, 반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치·군사적 필요에 의해 급격히 밀착되었음.

○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중국, 반서방 정책을 통해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러시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파고를 넘으면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실현하려는 북한, 이들 3국 간 이해관계의 필요성에 의해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등적 대결 현상을 신냉전(New Cold War) 또는 북·중·러 3각 동맹의 복원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현상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냉전은 미국과 소련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국제관계적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상황

2) “키신저 세계는 ‘무질서’...일본 3~7년 뒤 대량살상무기 개발,” <https://www.yna.co.kr/view> (검색일: 2023.12.5).

은 일부 국가들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웬트(A. Wendt)의 ‘로크적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음.

○ 또한 북·중·러 연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현재 당면한 외부적 변화에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형성을 유인한 외부적 요인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면, 그 구심력 또한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국제 질서의 무질서 현상은 2024년 미국의 대선 결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부,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 강화

○ 북한은 1961년 7월 6일 소련과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의 통해 냉전기 소련으로부터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음. 하지만 소련은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수교하였고,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도 1992년 한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맺고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였음.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환으로 북·러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귀결이 1995년 러시아의 일방적인 조·소 동맹조약 폐기 통고였음.

○ 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2003년 2월 9일 북한과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체결하였음. 이러한 북·러 관계는 러시아의 메드베데프(Medvedev) 대통령이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1차 핵실험에 대한 반발로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동하자, 재차 소원해졌음.³⁾

○ 이러한 북·러 관계는 2012년 5월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북한의 대러 채무 110억 달러 중 90%에 대한 탕감 조치로 호전되는 듯하였지만⁴⁾, 북한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으로 소원해졌음. 왜냐하면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 안정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러시아가 추진하는 서구와의 관계 개선에

3) 북·러 정상회담은 2000년~2002년 김정일과 푸틴(3회), 2011년 8월 김정일과 메드베데프, 2019년 4월 김정은과 푸틴, 2023년 9월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이루어졌다.

4) Pearly Tan, “Russia Agrees Deal to Slash North Korean Debt by 90%,” <https://time.com/69790> (검색일: 2024.4.12).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판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임.

○ 그럼에도 러시아는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음.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했기 때문임.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러시아에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북한의 세 번에 걸친 핵실험과 다종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러시아의 입장을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음.

○ 북한과 러시아의 ‘불편한’ 관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소되었음. 북한은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채택하려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⁵⁾를 던지는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동기가 NATO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발표하였음.⁶⁾

○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밀착을 계기로 다종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였음. 북한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하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2022년 31회, 2023년 18회로 대폭 늘렸음.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제재하려던 유엔의 시도는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또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의 무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북 제재마저도 러시아에 의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2022년 11월 2일 북한-러시아 간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되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 미사일, 소형무기 등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유류 등을 공급받았음.⁷⁾ 특히 식량 지원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예외 항목으로 인정되고 있어 러시아로부터 옥수수과 밀이 상당량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임.

○ 북·러 밀착 관계는 2023년 9월 13일 아무르(Amur)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로 나타났음. 이 회담에

5) 2022년 3월 2일 유엔 총회는 전투 중단과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찬성 141표, 기권 35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2022.3.29.

6)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러시아에 다 걸고 핵 폭주...외교적 승자는 북한?,” 『경향신문』 2023.2.23.

7) “北, 러에 로켓포탄 공급...정부, 몇 달전 포착,” 『동아일보』 2023.9.15.

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의의 싸움으로 러시아가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며,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⁸⁾

○ 그런데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아 양 정상에 무엇이 합의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러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의견과 반대로 “합의하였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려하여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의견이 갈렸음.⁹⁾ 현시점에서는 정확히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 군사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나진항 부두에서 선박과 화물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러 정상회담 이후 11월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음. 이 회담에서 라브로프는 “한반도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 활동 증대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축하자고 주장하였음. 2024년 1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라브로프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문제를 포함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건이 북·러 관계의 밀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미·러 갈등 관계가 다소 완화되는 시점이 오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밀착보다는 북한의 폭주를 제어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음. 즉 현재의 북·러 관계의 밀착은 정치·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¹⁰⁾

8) “김정은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전’이라고 말했을까,” 『경향신문』 2023.9.29.

9) 장세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 변화와 한반도 시사점,” 『2023년 한러대화 정책세미나』 (2023), p.30.

10) 우평균,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이기완 외, 『동북아 국제 질서와 한반도 통일』 (창원: 글서림, 2023), p.288.

3. 북·중 관계의 전략적 불신과 관리의 딜레마

○ 최근 북·중 관계도 북·러 관계 못지않게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1949년 10월 북한과 수교를 맺은 중국은 한국 전쟁을 거쳐 1961년 7월 11일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조·중 동맹)을 통해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음. 중국은 중·소 분쟁을 계기로 북한이 소련의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 지대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필요성에서 동맹을 체결하였음.¹¹⁾

○ 1972년 미·중 국교 회복 이후 북·중 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전개되었고,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면서 상당히 변질되었음. 중국은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의 핵 개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북한을 옹호하였지만,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자국과 사전 협의 없이 강행하자, 북한을 맹 비난하였음. 이 때문에 북·중 관계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북핵 문제는 북·중 관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음.

○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찬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음. 이처럼 중국은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안보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과 관리의 전략’을 취하였음.

○ 2012년 11월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장쩌민, 후진타오 체제와는 달리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 관계에서 정상 국가로 전환하고자 하였음.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표방하면서 핵 무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비핵화를 대북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던 중국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음.

○ 한·중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갈등이 표면화되었지만, 이 시기 북·중 관계도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개선되지 못하였음. 중국은 2016~2017년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6회

11) 이정남, “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평화연구』 제19권 1호(2011), pp. 125-154.

에 걸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북한을 방기할 수 없었음.¹²⁾

○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혈맹관계와 정상 국가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양극단의 어느 한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여 미국과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차단하려는 고도의 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¹³⁾

○ 2018년 들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해빙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북·중 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한 대북 접근 전략으로 변화하였음. 중국은 김정은 체제 성립 이후 그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정상회담을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회 가졌고, 심지어 2019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특별한 관계’라고 언급하였음. 그리고 2020년 1월 창궐한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도 북·중 양국은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협력을 과시하였음.¹⁴⁾

○ 이러한 북·중 밀착의 이면에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북한의 체제 붕괴가 초래할 안보 위협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음.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동시에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찬동해 왔음.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로 인해 북한의 붕괴도 북·미 관계의 획기적 개선도 원하지 않았음.¹⁵⁾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임.

○ 결국 6회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미국과 한·미·일 3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12) 오일환, “북중 신지도부의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변화 분석: 대미 외교공조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제28권(2016), pp.113-118.

13) 민병룡·윤성석,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인문사회21』 제13권 6호(2022), p.3243; 박민형, “북중동맹 55년 평가: 한국의 전략적 함의,” 『국방연구』 제59권 3호(2016), pp. 1-24.

14) 신종호, “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현대중국연구』 제24집 1호(2022), p.51.

15) 이정훈·왕유위,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사드 사태로 본 한중 대립,”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권 (2016), pp.45-46.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북·중 우호조약 60주년(7.11),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과 같은 주요 행사 때 양국 간 협력 강화로 나타났음.

○ 그러나 중국은 북·러 밀착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 밀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북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장관을 보냈지만, 중국이 리홍중(李鴻忠) 정치국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대표단을 꾸렸던 것에서 알 수 있음.¹⁶⁾ 중국은 북·중 밀착 강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일본·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임.

○ 문제는 북한이 지나치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과의 밀착을 선택하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중국 안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면서 북한과의 협력 범위를 결정할 것임.¹⁷⁾

○ 최근 북·중 관계가 개선된 이면에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내재되어 있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기존의 관세 및 기업 퇴출과 같은 영역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첨단 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에 따라 북·중 관계의 강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표출하고, 북·미 갈등의 심화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 북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4. 북·중·러 협력과 갈등의 딜레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함께 북·중 협력 강화로 북·중·러 협력이 복원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중·러 협력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16) 2013년 북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 때는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7) 장덕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중·러 관계,” 『외교』 제148권(2024.1), pp.97-98.

○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현시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모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힘에 대항할 수 없고, 최근 한·미 동맹 및 미·일 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적 고려로 인해 북·중·러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내재되어 있음. 실제로 북·중·러 협력 체제가 강화된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자국이 직면해 있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압박과 제재,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북·중·러 연대는 중국의 복잡한 전략적 고려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겠음.

○ 첫째, 북·중·러 협력 체제의 강화는 중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미국 및 서방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려는 중국에 있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의 고착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북·중·러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 북한과 러시아에 의한 도발 사태에 중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북한이 핵 능력의 고도화를 위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중국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하겠음. 이 때문에 중국은 북·러 밀착이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러 양국과 협력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¹⁸⁾ 이러한 사실은 표면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러시아의 정치적 위상 확대에 대한 두려움임. 중국은 현시점에서는 반서방을 표방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세력에 맞서려는 러시아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점은 2023년 9월 18일 제18차 중·러 전략과 안보협약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일방적인 행동 및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라고 한 언급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힘이 강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있음.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표방하는 ‘강대한 러시아 제국의 건설’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에는 향후 또 하나의 도전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더욱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깊은 불신이 있음. 즉 과거

18) 김한권, “202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29』(2023).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의 감정 역시 중국의 대러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 중국은 미국의 패권 저지하는 공동의 목표하에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둘 것으로 보임. 여기에 북·중 관계 및 북·러 관계는 미·중 관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적 변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북·중·러 연대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¹⁹⁾ 한·미 동맹 및 미·일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와 차이가 있음.

5. 북·중·러 관계와 유엔안보리의 정치 동학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공세적 핵 정책이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해 왔음.

<표 1>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2006.10~2017.12)

연월일		핵·미사일 도발 행위	유엔 제재
2006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1718호
2009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1874호
2012	12월 12일	광명성 3호	2087호
2013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2094호
2016	1월 6일	제4차 핵실험	2270호
	2월 7일	광명성 4호	
	9월 9일	제5차 핵실험	2321호
2017	5월 14, 21, 27, 29일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2356호
	7월 4, 28일	화성 14 발사	2371호
	9월 3일	제6차 핵실험	2375호

19) 서보혁,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2011), p.57.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 발사	2397호
--	---------	--------------	-------

출처: 이기완·여현철, “한반도 정세 변화의 요인과 쟁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3호 (2018), p.187.

○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북 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한층 강화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200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건부 단서 조항’을 달면서 10회나 찬동하였음.

○ 그러나 최근 미·중 전략 경쟁과 미·러 갈등의 심화 속에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를 위해 12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중·러 양국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어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하였음.²⁰⁾

<표 2>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불발 현황(2021.01~2023.12)

일시	내용	결과
2021.03.26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대응 논의	-
2021.03.30	북한 추가 제재에 찬성하는 의견 제시	중·러 반대로 불발
2021.10.21	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비난	일치된 의사 표명 무산
2022.02.04	2017년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러,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주장 미국 추가 제재 주장	일치된 의사 표명 무산
2022.03.25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긴급공개회동	일치된 의사 표명 무산
2022.05.12	미국 요청으로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	중·러 반대로 무산
2022.05.27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 축소와 관련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중·러 거부권 행사로 부결
2022.10.05	탄도미사일 발사, 공동성명 발표	일치된 의사 표명 불발
2022.11.04	긴급 공개 회의 개최, 비난 공동성명 발표	일치된 의사 표명 불발
2023.02.20	탄도미사일 발사, 비난 공동성명 발표	일치된 의사 표명 불발
2023.04.17	탄도미사일 발사, 비난 공동성명 발표	중·러 반대로 일치된 의사 표명 불발
2023.07.13	ICBM 발사 비난, 안보리 일치한 대응 요구	결의안 채택 불발

출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20) 이기완, “객관적 한반도 정세 인식 형성의 한계와 과제,” 『한국보훈논총』 제22권 제3호(2023), p. 51.

○ 더욱이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2024년 3월 28일 러시아 반대로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동년 4월 30일부로 해체되었음.

○ 현시점에서 미·중 간 또는 미·러 간 갈등이 계속되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 동맹의 결착 현상을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 채택을 불가능하게 하여 한반도 정세 불안정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Ⅲ. 통일 환경의 변화와 한·미·일 관계

1. 한미 워싱턴 선언과 동맹의 공고화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 4월 26일 한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음.

○ 미국은 한국이 느끼는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고, 핵무기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한국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음. 또한 미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전략핵 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포함하여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약속하였음. 미국은 SSBN의 정례적인 한국 기항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하지는 않지만, 핵무기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²¹⁾

○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23년 7월 18일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서울에서 첫 번째 한미 NCG 회의가 열렸음.²²⁾ 여기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동 대응 의지를 명확히 피력하였음.

21) 김법현·박용우,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대한정치학회보』 31집 3호(2023), p.176.

22) 김민성,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의의와 북한의 인식,” 『KINU Online Series』 (2023.8.4), pp.1-4.

2.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갈등의 관리

○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후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여 정치적·안보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역사 인식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과 같은 정치 쟁점으로 인해 갈등-대립-조정-화해의 정치과정을 반복해 왔음.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로 한층 확대되었고, 그 갈등의 양상 또한 종래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었음.

○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부여해 온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지위를 철회함으로써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안보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음. 이러한 갈등 영역의 확대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한·일 갈등과 불신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협력과 동참을 요구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즉 우리 정부는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본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는 것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일 양국이 갈등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따라서 한·일 갈등이 표출되었을 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특정 영역의 갈등이 다른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며 갈등을 제한적인 영역에서 다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5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2019년 갈등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음.

<표 3>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의 정치과정

	제외		복원	
	시행 일시	사유	시행 일시	사유
한국	2019.09.18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반발	2023.04.24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해제
일본	2019.08.28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책임 인정 판결 반발	2023.07.21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0770> (검색일: 2023.7.23).

3.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의 유지

○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일 협력,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의 강화는 매우 긴요함. 그동안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는 한·일 갈등으로 인해 기대하였던 것만큼 작동하지 못하였음. 특히 문재인 정권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기에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후 ‘일본 패싱’(Japan passing) 문제 등으로 오히려 갈등과 불신의 감정이 확대되었음.

○ 이러한 한·일 간 갈등은 북핵 문제를 앞에 두고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 이러한 한·일 갈등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 정도 해소되었고 그 귀결이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였음.²³⁾

○ 한·미·일 3국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공약에서는 동맹에 준하는 수준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23) 민태은·이기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 『KINU Online Series』 (2023.8.20.); 김정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과제,” 『세종논평』(2023.8.22).

우선성 등이 명시되었음. 결과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한·미·일 3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수정주의적 세력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말할 수 있음.

IV. 통일 담론의 국제화

1. 통일 담론의 국제화가 필요한 이유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세력에 의해 동서독으로 분단되었음. 하지만 서독은 1969년 동방정책을 채택하고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1989년에 찾아온 냉전 종식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통일을 실현하였음.

○ 하지만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었던 남북한은 서로를 적대시 하며 통일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그리하여 1972년 미국과 중국의 국교 회복 및 일본과 중국의 국교 회복, 그리고 1989년 냉전 종식 등과 같은 국제체제의 구조 변동을 한반도 통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음.

○ 한반도 통일문제가 동북아 4강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방정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체제의 변화를 이용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지점임. 하지만 이러한 미·중 갈등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1972년 미·중 국교 회복이나 1989년 냉전 종식처럼 언젠가 해소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임.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또는 암묵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함.

○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통일하려는 이유와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해야 함. 말할 필요도 없이 통일한국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야 함.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헌법정신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구체화되어 계승되고 있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철학으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임. 그런데 이러한 공통의 보편적 가치는 민족 관념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주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이 보편적 가치 실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민주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정 기간 비민주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정치적·외교적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이들 국가로부터 소극적 지지라도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의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진보 성향의 정부는 북한을 신뢰한다는 전제에서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음.

○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동북아 4강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비전이 무엇이고, 한반도 통일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증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리고 그 지지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주요 고위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크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미·일 양국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에 찬동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그동안 미·일 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을 지지 한다.”라고 주장해 왔음.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은 외교적 성과 중 하나는 우리의 통일비전에 대해 미·일 양국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한반도 통일비전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은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통일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

지와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큰 동력이 될 것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일일 것임.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음.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공식, 비공식 외교 무대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중·러 양국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비전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것이 중·러 양국이 주장해 왔던 한반도 정책과 상충하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나가야 함.

2. 통일 담론의 국제화 내용

○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즉 통일 담론의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해야 할 통일비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는 통일

○ 통일은 억압적인 독재 체제 하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폭력적인 감시와 통제, 공포와 살인 등의 방식을 통해 북한 사회와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5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²⁴⁾

○ 이러한 사실은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서 명확히 알 수 있음. 즉 북한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전환 없이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함.²⁵⁾ 우리 정부는 통일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흑시 모

24)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7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p.255-256.

25) 변종헌, “북한의 인권문제의 체계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제47집(2015), p.135.

를 반대를 관리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에서 시작되어야 함. 북한 주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내외에 알리고 전파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전제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이러한 과정의 지속은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 분단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군사적 위협은 남북한과 동북아 4강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역내의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보증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나가야 함.

○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 구조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 최근 북한은 중·러 양국과의 밀착을 바탕으로 핵 무력의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핵 무력 사용을 공공연하게 천명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음.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의 안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음.²⁶⁾

○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 정부는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 구조가 정착되기 어렵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 질서 역시 무질서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함.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통일의 기본조건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임.

26) 통일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서울: 통일부, 2022), p.21.

○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나 북·미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함. 이러한 이면에는 핵무기가 방어용 무기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 내재되어 있음. 미국과 러시아가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대결하던 냉전 시기에도 핵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가 간 관계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선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히고 북한과 중국의 입지를 높여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필자도 핵무기가 기본적으로는 방어용 무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핵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북한도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한 논거가 될 수는 없음.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칭적 상황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이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임. 반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손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음.

○ 우리 정부는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향후 핵 보유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일한국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유일한 해결 방안이자 대안임을 공적인 외교무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야 함.

V.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 담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국제 정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도 통일 환경 조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북한은 2019년부터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신하였고, 급기야 2024년 들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선언하면서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미 양국을 제압하고 영토를 통일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표명하였음.²⁷⁾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북한이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으로 정의한 데 대해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하였음.²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체제로 평가하고, 우리가 자유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대상이자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언급하였음.

○ 이러한 상황 변화는 우리의 통일 담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 담론의 재구성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반도의 평화 구조 정착과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의 재정립 위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일 담론의 국제화가 필요함.

○ 통일 담론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등의 내용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함. 이러한 내용과 방향은 기존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반공 이념에 기반한 통일,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통일 논의 등이 초래한 정파적, 배타적인 논쟁을 잠재우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4강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27) “김정은, 핵 무력 포함 모든 수단 동원해 대사변 준비,”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 (검색일: 2024.2.15).

28) 대통령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2024.1.31.

토론문

(글로벌 안보 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김범수(서울대학교)

최근 몇 년 사이 세계는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 이후 약 3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때 흘러간 과거의 일로 치부되었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귀환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중 전략 경쟁이 날로 심화하면서 ‘신(新)냉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점차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당분간 긴장과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초기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점차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위협에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¹⁾ 또한 취임 1주년을 앞둔 2023년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가 힘의 우위에 입각해 탈바꿈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로 강경 대응할 방침을 천명했다.²⁾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15일 「2023 한미 연합·합동 화력 격멸훈련」을 주관하며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1) 한지훈·이동환, 「尹대통령 “日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고 하겠나...막기 어려워”」, 『연합뉴스』, 2023년 1월 11일.

2) 김환용,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 선의에 안보 기대지 않아” ... 전문가들 “남북 ‘강대강’ 국면 장기화”」, VOA 2023년 5월 9일.

이러한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을 통한 확장 억제 체제 구축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방침을 명시한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2023년 8월 18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수상은 미국 워싱턴 D.C. 부근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고, 3국 협력의 큰 틀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라는 명칭의 공동성명, 위기 상황에서 3국이 공조하기로 약속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힘에 의한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 억제’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서 ICBM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2024년 1월 이후 서해 북방 도서 인근에서 수 차례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1월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1월 19일 무인수중공격정 ‘해일-5-23’ 개발 시험, 1월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첫 시험 발사, 1월 28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시험 발사, 1월 30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등 대남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tit-for-tat’ 전략으로 맞대응 할 경우,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양측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보이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1월 8~9일 북한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당분간 남한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또한 1월 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남북 모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당분간 남북한 사이에 긴장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기존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일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³⁾ 실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의견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남북관계의 목표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 또는 우호적”인 “두 국가 관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3) Bumsoo Kim, “From Unific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Global NK Zoom & Connect*, October 31, 2023. <https://www.globalnk.org/commentary/view?cd=COM000126>

4)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2024 지역의 통일교육 쟁점과 확산 방안(학술 세미나)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토론문 -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문기홍

저자께서 연구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 대선은 단순한 하나의 국민국가 영토 내에서의 정치적 지도자와 지도력을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 파급력이 크기에 아마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적 행사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는 중요한 11월로 다가온 전체적인 관점에서 미국 대선의 향방, 당내 경선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조망하고 있으며, 특히, 두 후보가 가진 대외 정책의 주요 차이점에 집중해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하며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점을 가지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미국 정치 혹은 대외정책 관련 연구에 전문성이 다소 약하기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자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양 후보가 상정했듯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대중국관련 대외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바이든은 민주적 가치, 협력 등에 기반해 실용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반면, 트럼프는 보다 공세적인 견제 및 제재 조치를 포함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미국의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중국 부상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가. 이들의 전반적인 입장은 어떠한 관점에 더 가까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이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면 두 후보의 다른 정책적 기조의 차이가 실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둘째,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대외정책은 어떠한지 예상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라오스에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메콩강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등 동남아시아 내의 소지역 그룹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힘쓰는 모습이다. 그에 반해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하는 등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있기에 대다수

의 아세안 국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 받지 못한 채 소외되기도 하는 등 소다자협력 체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지정학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질 수 있는 동남아시아(아세안) 국가에 대한 두 후보의 대외정책은 어떠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술 세미나의 주제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지역 통일교육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알고 있기에 한미 동맹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의 방향은 어떠할 것이며, 한국은 각기 다른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질문드리고 싶다. 특히,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정상외교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 시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하기에 향후 두 후보가 어떠한 점을 강조할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다.

토론문

(북한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홍석훈(국립창원대학교)

○ 북한인권과 관련된 현안

- 북한인권 실태의 쟁점 사항: 자유권, 정치범 수용소(인신의 구속), 계층과 성분으로 주민들을 분리
- 사회권: 통제와 차별, 주민 생존권 열악: 식량과 보건,
- 북한의 인권관: 계급개념, 집단주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 이해, 북한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
- 국제적 관심사로 북한인권 문제
유엔차원에서 총회,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2003년부터 2021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2005년 이래 매년 인권보고서 제출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인권 결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내외적 비판
-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
노무현 정부 시기, 17대 국회부터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10여년 지속: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기록, 인도적 지원, 인권대화, 민간활동 지원 등이 법적으로 보장함.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함

○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접근

- 2019년 5월 9일 북한의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제3차 보고서에서 강조된 부분 중 하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것 △아동권리협약 5, 6차 보고서 제출(2017년), △여성차별철폐협약 2, 3, 4차 보고서 제출(2017년),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2014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16년) 및 최초 국가이행보고서 제출(2018년), △UN 장애인인권보고관 방북 허용(2017년) 등 북한이 지난 5년 간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한 사안을 열거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

- 유엔 보편적정례검토 실무그룹은 북한의 제3차 UPR 회의 이후 유엔회원국들의 권고안을 종합하여 총 262개의 권고를 제시하였으며, 권고의 내용은 제2차 UPR 당시 제시된 것과 다수 중복되는데, 2차 때 권고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즉각 수용을 거부한 63개 권고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정치범 석방 △연좌제 철폐 △성분제 철폐 △언론 검열 금지 △납치자 석방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도적 처우 근절 등 주로 자유권 관련 사항으로, 체제 유지에 근간을 이루는 것들임.
- 평화 지속화 개념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개념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분쟁 중단 및 종식 등 군사적 차원에서의 안보 강화라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관련한 잠재적 갈등요인 및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나감으로써 근원적 분쟁 요인을 해소
- 북한의 반응:
북한은 자유권보다 사회권 관련 사안에 대해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임.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리임. 사회권의 신장은 자유권에 대한 갈망을 견인하여 북한사회 내부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함.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북한 인권 문제 접근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2022년 5월 10일) 국정 목표 중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발표하며 대북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 ‘원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추진할 것을 표명
- 광복절 경축사(2022년 8월 15일)에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대북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선언
- 북한의 비핵화에 복귀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나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을 통한 북한 관여정책을 제시했다는데 이의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가치에 기반한 외교와 자유, 인권, 법치에 기반한 대외전략을 추구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다자협력, 대북압박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서방세계와 같이 추진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국가들에게는 보편 타당한 가치임을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타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가치가 아니라 상생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한다는데 강점을 두어야 함.

○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국제협력: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및 미래 국가전략 마련

-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지 못한 주요 요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 고수에 있으며 체제 변화 없이는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이기 힘든 상황임. 다만,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통일담론의 부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 아젠다가 필요
-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노력 필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그 지속 가능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도모도 용이할 수 있음.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와 각 목표 달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활용하여 남북한 인도개발협력 모델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의 전략적 연구가 필요(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 정부+시민단체(글로벌 NGOs) 연계, 인도적 지원-발전-평화의 통합적 트리플넥서스 논의 확장 등).
- 북한인권 개선의 우선적 대상은 노약자, 영유아,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북한 당국은 자유권보다 사회권 관련 사안에 대해 비교적 열린 자세임(사회권 신장은 자유권에 대한 갈망을 견인하여 북한사회 내부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리)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증진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되어야 함(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MZ세대를 포함하는 세대 통합교육 및 통일인식 함양 등이 요구되며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통합정책 추진이 필요)
-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

토론문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국제화)

여현철(국민대학교)

- 2024년 현재 상태는 불확실성이 높은 전환기로 볼 수 있음
 - 발제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중·러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음
- 과거 통일환경을 구성했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 △한미동맹, △남북관계 합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 및 평화, 합의, 점진 원칙 공유, △민족적 접근 등
- 발제자의 문제 인식처럼 2024년도는 통일환경의 일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전지구적인 안보 우려 증대, △신냉전의 양상, △북한 핵무장 및 북러 군사협력 고도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그리고 △트럼프 재선 등
- 북한의 새로운 노선
 - ① 남북한은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 ②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중대한 착오
 - ③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표현을 삭제할 것 주장
 - 세가지 주요한 전환을 함축
 - ① 남북한 동족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폐기
 - ② 탈냉전 이후의 남북교류협력을 전략적 오류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
 - ③ 김일성, 김정은 시대의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조 부정,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영토를 평정’할 무력중심 강경노선으로 선회

○ 한국 사회의 변화

-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체제의 구축
- 이념간, 정파간 이견 및 대립 심화
- 국민들의 대북 호감도, 민족의식과 통일지향의 약화 (적대, 경계 대상/ 안보불안의 증대 / 통일에의 기대감 하락)

○ 평화통일은 4가지 차원의 대응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① 지정학적 변수통제
- ② 북한의 공세적 입장 저지
- ③ 한국사회의 통합역량 증진
- ④ 미래지향적 체제형성 비전

(질문)

1. 2국가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 어떠한 통일유형으로 정립하여 어떻게 추진?

토론문

(글로벌 안보 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황기식(동아대학교)

1.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2024년 미국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한반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유라시아 그룹의 “올해 최대의 위협은 ‘자신과 싸우는 미국’”에 관한 분석은 그런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전례 없이 문제가 많은 미국 선거가 세계의 안보, 안정, 경제 전망에 그 어느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 미국 대선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이 지난 150년간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민주주의를 시험하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약화할 것. 미국의 대선이 세계 80억 인구의 운명을 결정하겠지만, 오직 1억 6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투표하며, 특히 고작 몇 개 경합주에 있는 유권자들이 승자를 결정할 것“.

발표자는 현재까지의 판세와 진행상황등 미국대선의 경과를 우선 잘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선거의 독특한 선거방식인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 vote) 제도의 특징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논문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논문에서 제시하는 11월 본투표까지 남아있는 주요변수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흥미롭다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상황, 바이든 대통령 낮은 국정 운영 지지율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개선. 1,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50년만 최저 실업률,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등 주요정책 성과, 유권자들의 실물과 다른 체감 경기). 즉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 여부가 주요관건이라는 분석제시.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예측은 가장 중요하다. 미국우선대외정책과 안보무임승차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대 중국정책의 비교분석은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변화에도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고 본연구의 중요한 업적임. 다만 한반도정책에 대한 언급 없어 다소아쉬움.

2. 북한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먼저 현재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방침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잘 정리하고 있음. 특히 가치공유국과 유대관계 강화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가치외교 추구 기조하에, 북한인권 문제 더욱 관심
- 글로벌 안보 다중복합위기 직면 상황, 정부 지향 목표 원칙 명확히 설정, 국제정세 예의주시하고 세부 전략 구체화
-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주요 가치에 있어 한국은 지금까지 모범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옴.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의 발전적 재편을 추구해야 함
- 북한인권 문제 위차원에서 해결 도모 중요,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유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가치공유국 또는 즉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과의 연대 및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핵심 과제임

아울러 윤석열 정부 2년간의 북한인권 관련한 주요행보들을 핵심 요약 평가하고 있음.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발간 등 ‘북한인권’을 대북·통일 정책의 본질로 다룸. 7월 14일을‘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제4차 UPR에서 탈북민 인권문제 처음으로 직접 거론 등.

발표자의 핵심 주장은 북한인권 실태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제시에 잘 드러나있고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평가. 이에 본 논문의 핵심 업적부분 이라고 평가함.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초당적 접근과 탈(脫)정치화 컨센서스.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책임규명을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 북한인권재단 조속한 출범
-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미국의회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등 활동 참조
- 유엔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시스템 효과적 구축 필요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제시한 행위자별 역할 분담론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설득력이 높음.

- 북한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 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어려운 특정 사안의 경우 시민단체가 주된 역할을 맡되 이와 관련한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현실적 차원의 접근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3.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제고

발표자의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함. 특히 한미일 3국 공조체제와 북중러 밀착 체제의 갈등적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서론은 정확함.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중 전략 경쟁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북·러 밀착 및 북·중 협력의 강화와 함께 한일 관계의 개선 및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의 강화 등에 의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적 구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중요한 통일환경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함.

아울러 북·중·러 연대의 실현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중국의 복잡한 전략적 고려를 잘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임. 아래의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 북중러 연대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함.

- 북·중·러 협력 체제 강화는 중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러시아의 정치적 위상 확대에 대한 두려움.

결론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통일담론의 국제화'는 본 논문의 핵심주장이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하며 상당부분 동의함. 특히 국내여론과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는 통일담론의 국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높음.

- 북한이 민족개념을 부정, 대한민국 교전상대국으로 정의. 윤석열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북한정부체제로 평가,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대상.
- 통일 담론의 변화 요구, 북한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의 재정립 위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일 담론의 국제화 필요.
- 통일 담론의 국제화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등이 핵심가치가 되어야함. 기존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반공 이념에 기반한 통일,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통일논의 등이 초래한 정파적, 배타적인 논쟁을 넘어서.
-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동북아 4강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것임.

제 2 세션

라운드 테이블

.....

[토론문]

장보권 (부산여자대학교)

이상빈 (국립창원대학교)

박상영 (한국교원대학교)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정은정 (동아대학교)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병훈 (국립창원대학교)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최희규(국립창원대학교)

기본적으로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1. 의식 개선: 통일에 대한 중요성과 이점을 강조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교육 및 정보 제공: 통일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을 높입니다.
3. 다양한 매체 활용: 영상, 소셜 미디어, 축제, 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4. 대화와 토론 장소 마련: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킵니다.
5.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사람들이 통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분야별로 구분을 해 보면,

1. 교육: 통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과 이점, 그리고 통일 이후의 전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3. 문화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4. 사회운동: 사회운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5. 정책 제안: 정책 제안을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6. 국제 협력: 국제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7. 시민 참여: 시민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8. 학술 연구: 학술 연구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9. 청소년 교육: 청소년 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리 해 봅니다.

먼저, 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역사와 가치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 관련 특별 강의나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합니다.

2. 교육 자료 제작: 통일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합니다.
3. 교육 캠페인: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도를 높입니다.
4. 교육 커뮤니티 구축: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교육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5. 교육 이벤트 개최: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도를 높입니다.
6. 교육 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에서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합니다.
7. 교육 예산 확보: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합니다.
8. 교육 평가: 통일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합니다.
9. 교육 홍보: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장보권(부산여자대학교)

저는 이번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를 접하고 궁극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 특징과 지리적 위치를 불문하고 우리 ▲한반도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역의 통일교육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겠다는 고민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통일 교육 구상, 나아가서는 ▲지역 부산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확산 전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장: 한반도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역의 통일교육 방안.

첫 번째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지역의 교육체계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학구열과 교육열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라 전국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대중교육 등을 통해 폭넓게 통일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교육을 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시,도는 각자 다양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도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센터, 문화 예술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입니다.

셋째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통일교육 확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널리 보급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에서의 통일교육의 확산은 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여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2장: 지역 대학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확산 전략 및 청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상.

저는 현재 지역대학의 교수로서, 대학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확산 전략 및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음과 같이 미래세대를 위해 모든 대학이 함께 실천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학사 교육과정의 통일화**: 대학에서는 학사 교육과정을 통일 이슈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교양 교육에서도 통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통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 내에서 통일에 대한 특별 강연, 토론,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학생들끼리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통일 관련 연구 및 활동 지원**: 대학은 통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통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통일 관련 학회나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4.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교류**: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은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교류를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 주제의 문화 축제,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고, 다른 대학 또는 지역사회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을 활발히 진행하여 다양한 문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5.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 대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 웹사이트나 SNS를 활용하여 통일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편의에 맞춘 통일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렇듯 여러 채널들을 통해, 대학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지역 부산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확산 전략 - 부산 시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구체적 활동.

특히 부산은 한반도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양대 축이자 핵심 도시로서, 통일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의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설: 부산시와 시민이 통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강연,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매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평화포럼 (Busan Peace Forum)이 대표적인 예인데 통일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강연이 진행됩니다. 국내외 통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모여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통일 관련 문화 이벤트** 개최: 부산시내에서 통일 관련 문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을 주제로 한 전시회, 공연, 영화 상영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3. **통일 캠페인 및 홍보** 활동: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포스터 전시, 통일 관련 SNS 캠페인, 그리고 지역 매체를 활용한 통일에 관한 기사 및 보도를 통

해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통일문화축제 (Unification Culture Festival)를 매년 개최하여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축제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4. **통일 행사 및 행진** 개최: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나 행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5. **시민 참여형 토론 및 토의회** 개최: 시민 참여형 토론이나 토의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2024년에도 부산지역에서 시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통일은 우리의 공동 목표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와 주무부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을 통해 통일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더불어 정부와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이상빈(국립창원대학교)

I.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0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남과 북의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등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고착화된 지 70년이 되고 있다.

0 시간의 흐름은 단순히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의 문화, 사회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 등의 차이도 심화시키고 있다.

0 세계화에 따른 지구촌 시대가 개인들 간 지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남북관계만큼은 완전한 자유왕래와 접촉이 차단된 기형적 모습으로 ‘국제화의 고아’로 남아있다.

0 분단이 초래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단절만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회에 상대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인지의 렌즈를 공고하게 심어 놓았다.

0 개인들이 주변과 행위자에 대해 얻는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들에게 내재된 인지의 틀 혹은 렌즈를 통해 1차 투과된 것이 더 많다.

0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오해와 편견을 넘어 개인의 인지구조에 고착된 정보처리과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0 통일교육은 이와 같이 한국 사회 전반과 구성원들 사이에 뿌리 깊이 박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 악마적 이미지와 무의식적 공포를 덜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0 통일은 기본적으로 최소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합의

에 이를 수있는 공통의 가치체계로 새롭게 구축해가는 과정이다.

0 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온전히 하나의 가치체계를 남북한이 공유하기에는 지난 분단의 세월 속에 사회가 너무 많이 분화되었다.

0 통일교육과 관련된 많은 행위자들이 지향하는 통일의 최고의 목표가 통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더 큰 목표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

Ⅱ. 주제와 관련한 토론자의 생각과 전하고 싶은 말씀

0 현재까지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이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평화·통일교육은 이해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평화지향적, 공존수용적일 필요가 있다.

0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평화, 통합, 신뢰, 화해, 민주, 정의 등과 같은 어휘와 개념들의 병렬적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한 원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학교교육에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한국사회에 대한 반성과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신과 두려움을 통제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함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통합적 관점에서 통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0 남한체제의 우위에 기반을 둔 국가 및 제제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가정하기보다 남북한 사회 및 문화의 통합을 고려하는 장기적 플랜의 기초로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0 통일교육은 정치체제와 이념에 대한 이해교육에서 사회문화 이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민족관계의 특수성과 세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자질 함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민족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병행되어야 한다.

0 통일 그리고 통일교육이 정부의 독점적 영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학교통일교육 주체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규프로그램과 과정 외 프로그램의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통일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정부 주도의 제도권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0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비교에 그치지 말고,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타자의 이미지 혹은 공포를 넘어 개방적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통합지향적 사회 발전이 가능해진다.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박상영(한국교원대학교)

통일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통일 이후 남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하고 유지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형식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민주주의’의 핵심 아이디어가 주요 형식과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규범적 당위가 아닌 정치적 현실에 근접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아이디어와 그 내용은 아직도 모호하고 논쟁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북한 통일 이후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본 토론문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이 갖는 딜레마와 통일 이후 그것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 본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democracy)’ 개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뜻한다는 점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이때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의미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 권력분립, 그리고 표현, 결사, 종교, 재산의 기본적 자유 등의 실질적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련의 제도들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Zakaria 1997, 22). 민주주의 개념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비교 연구의 주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스웨덴의 V-Dem 연구소(V-Dem Institute)의 ‘민주주의 보고서(Democracy Report)’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와 대비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¹⁾ 이와 함께 또 다른 민주주의 평가지표

1) V-Dem 연구소의 민주주의 보고서는 각국의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선거 독재(Electoral Autocracy), 폐쇄 독재(Closed Autocracy)’

로 널리 사용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지표 역시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유종성 2014, 13-14).

또한 국내외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민주주의’ 개념도 보통 ‘자유민주주의’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학자들 역시 포괄한다.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선언으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편성을 주장한 바 있는 보수 성향의 프랜시스 후쿠야마(Fukuyama 2022, 3)는 2차세계대전 이후 북미나 유럽, 혹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공고화된 민주주의 유형을 지칭할 때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진보적 시각에서 급진적 민주주의를 제안하는 샹탈 무페(Mouffe 2019, 14) 역시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지칭할 때 그것은 보통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democracy)’ 혹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용어의 선택과 사용 그 자체를 정치적으로 첨예한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매우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논쟁성은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특정한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한국의 보수 진영이 명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개념인 반면에 진보 진영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보이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대신 선호하고 있다. 이진우(2019, 137)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은 ‘자유’라는 낱말에 집착하고, 진보 세력은 ‘민주주의’라는 낱말을 고집”하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대체로 보수의 어휘이고, 진보 진영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라는 대안적 어휘를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갖는 특정한 정치적 성격과 이념적 함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빈번하게 논쟁과 대립의 소재로 작용한다.

2000년대 이후 주로 보수 진영이 소리높여 외치며 확산시키고 있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담론은 대부분 ‘반공 자유민주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외피로 한 채 내용상으로는 ‘반자유주의적(anti-liberal)’ 혹은 비민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 지수(Electoral Democracy Index)’와 ‘자유주의 요소(Liberal Component Index)’의 결합으로 측정한다.

주적인 자유민주주의의 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의 이러한 제한적인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그 기형적 담론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 주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형성 및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제한된 ‘자유민주주의 담론’은 무성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본래의 핵심적이고 본질적 가치 요소들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의 기회는 박탈되고, 이는 결국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핍은 특히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일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 참고문헌

- 유종성. 2014.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동향과 전망. 90호: 9-44.
- 이진우. 2019.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철학과현실. 통권 제120호: 147-166.
- Fukuyama, Francis. 2022.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London: Profile Books.
- Mouffe, Chantal. 2019. For a Left Populism. New York: Verso.
- Zakaria, Fareed. 1997.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76(6): 22-43.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가상현실(counterfactual) 상상력 제고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방안

1. 통일! 교육의 대상인가 아니면 동의의 대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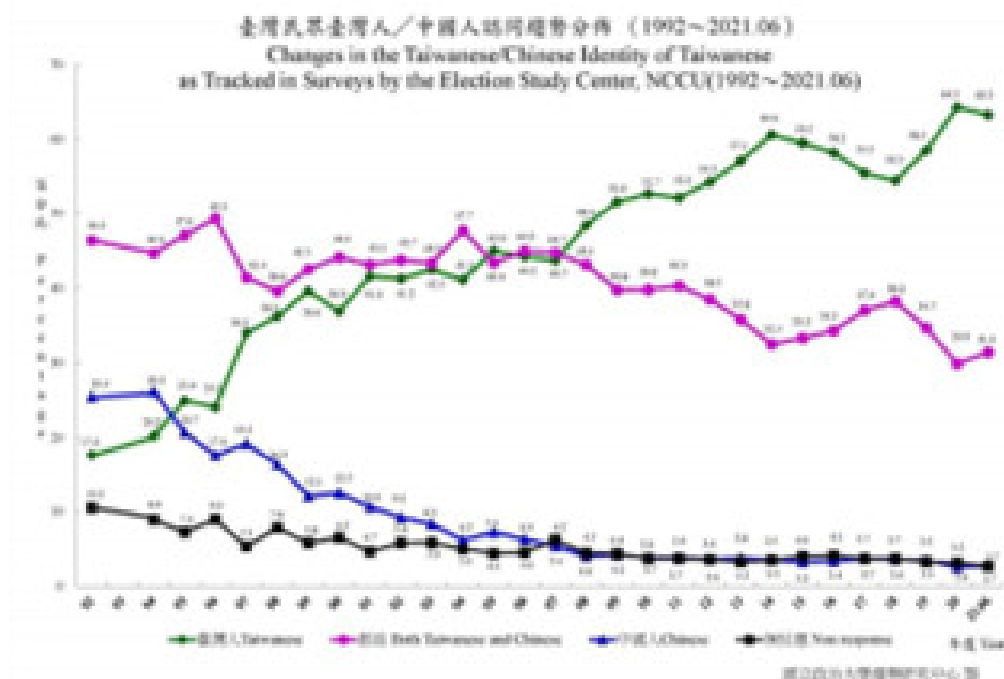
○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경험한 신생 민주국가에서는 최근 세대 정치가 두드러지고 있음.

- 본래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은 독재 vs. 반독재, 지역주의, 다인종, 종교, 계급, 도시 vs. 농촌 등에 기반해 발생했으나 최근의 사회적 균열은 세대에 기반하고 있음.
- 최근 세대 기반 사회적 균열은 주로 젊은 유권자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어 정당을 지지하거나 창당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령, 2000년의 멕시코 선거, 2016년의 대만 총통 선거, 2019년의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장 선거, 2019년과 2023년의 태국 총선 등에서 세대 정치가 나타났음.
-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2016년의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을 당선시킨 해바라기 운동(2014.3.18.~4.10)임. 3.18 학생운동으로 불리기도 하는 해바라기 운동은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대학생 1만여 명과 시민 10만여 명이 입법원(한국의 국회)을 점거함으로써 민진당을 비롯한 탈중국 진영이 대만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하도록 만든 전환기적 사건임.

○ 해바라기 운동을 촉발시킨 것은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재활성시킨 “하나의 중국” 정책임.



- 대만 민주화의 물꼬를 튼 국민당 리덩후이 총통이 1995년 코넬대 강연에서 양안을 “국제적으로 동등한 합법적인 두 체제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음. 그럼에도 1996년 총통 선거에서 리덩후이가 당선되었음. 이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대하는 민진당이 집권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고 결국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당선되었고 2008년까지 집권하게 되었음.
- 이 시기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보는 비중은 1996년 25%에서 2008년엔 45%로 무려 20% 포인트나 상승했음.
- 이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만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지체되기 시작함. 천수이벤 총통이 취임하고 1년 뒤인 2001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년도 6.31%와 비교해 급락하게 되었고 임기 마지막인 2008년엔 -9.61%까지 곤두박질쳤음.
- 이에 추가하여, 천수이벤 총통의 부정부패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2008년부터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옹호하는 국민당의 마잉주가 총통으로 당선됨.



○ 국민당 마잉주 총통의 당선으로 양안 관계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나 역풍이 불기 시작함.

- 마잉주 총통 시기 중국은 경제적인 압박을 해제했고 그 결과 마잉주 집권 2년차에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무려 10.25%로 치솟게 되었음.
-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마잉주 총통은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음. 하나는 양안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하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일체성 강조와 반일적 서사를 포함하는 대만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내용 변경이었음.
- 그러나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한 것을 기억하고 있던 대만의 대학생과 청년 세대는 해바라기 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반중감정이 더욱 확산되고 말았음.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보는 비중이 마잉주 총통이 임기를 시작한 2008년 45%에서 그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6년 즈음

엔 60%로 15% 포인트나 상승했음. 이후 2016년부터 2028년까지 민진당이 집권하게 되었음.

- 이러한 사례로부터 통일 교육에 대한 우려스러운 함의가 도출될 수 있음.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투 과업을 제시하면서 “전쟁 준비 완성”, “남한 영토 평정 준비” 등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발언을 했고 고도화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대남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음. 또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음. 남북 간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국의 대학생과 청년 세대 사이에 통일 공감대 조성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음.
- 이러한 가운데 “북한 바로 알기” 또는 “북한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기” 같은 방식의 접근법은 오히려 통일 공감대 조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짐.

- 가령,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소가 개설하고 경남통일교육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Youtube 채널의 구독자는 고작 183명에 불과함. 동영상도 86개만 게시되어 있고 평균 조회수는 100회에 불과함.
- 최근, 북한이 Youtube를 통해 야심차게 발표한 “친근한 아버지”라는 뮤직비디오도 영상 편집과 리듬, 멜로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도 했으나 가사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상당수였음.

2. 사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대체로 사관학교 ‘군사학’ 교과 과정은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다만 필자는 우회하는(?) 방식으로 ‘일반학’(국제관계학) 교육을 진행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가령, 국제관계학에서 많이 논의되는 민주평화이론, 청중비용이론, 선출인단이론, 민군관계이론, 올슨(Mancur Olson)의 민주주의 진화론 등을 통해 민주국가가 평화 유지, 위기 승리, 전쟁 승리, 경제성장, 복지, 군사력 증진, 군인 처우 등 공공재 제공에서 독재국가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이론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를 교육하고 있음.
- 동시에 “한반도 전역이 민주국가로 통일된다면 OOOO이 가능하다”라는 가상현실적 사유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음. 이것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혐오해야 하며 말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 하는 방식이 아님.
- 보수화된 대학생과 청년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전역이 민주국가로 통일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통일 국가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상하도록 교육하는 방식임. 물론 이 전제가 북한을 고려한 “통일 방식”을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굳이 논하지 않아도 통일이 가져올 잠재력을 상상케 하여 통일의 편익과 당위를 사유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음.
- 생도들이 내놓는 답안 가운데는 전시작전권 회수, 미중 사이에서 헤징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유로움, 급감하는 군병력 해결, 인구 급감 해결, 고구려사 복원과 동북공정 저지,

국방비 절약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 증진, 대일본 정책의 변화 등이 있음. 물론 이러한 답안은 기성 세대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나 현재 경색된 한반도 상황은 이러한 당연한 것을 대학생 및 청년 세대에게 일깨워줘야 함.

- 결론적으로,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통일 교육은 통일이 과연 가능할지, 어떻게 통일해야 할지 등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 또는 북한을 혐오하는 주적 개념을 강조하는 것보다 통일의 편익과 통일 한국의 잠재력을 일깨워줌으로써 통일의 당위와 통일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공감대가 북한 공감대(이해도)가 아니라는 것을 교육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정은정(동아대학교)

통일공감대 확산을 통일교육의 방향: “이분법적 통일담론 극복을 위한 노력”

공감의 시작이 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상대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접 경험과 교육을 통한 간접경험에서 나온다. 통일 공감을 위한 상상력은 교수방법론의 관점에서 체험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이라 할 수 있으나, ‘통일’의 관점에서는 전쟁과 분단 과정의 경험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은 관념(idea) 속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가게 하는 도구이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교육은 담론의 함수통을 지나 공감을 산출해 낸다.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주의는 계급사회이다’라는 명제가 공산주의 혁명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사회와 타인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서 공감을 통해 사회를 해석하는 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론(discourse)’의 정립은 통일교육의 핵심이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러 통일담론과 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의 차이로 인한 논쟁이 있다.

담론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지식이 담기게 되는데, 보편성을 가진 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담론정치(discourse politics)’가 통일담론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 공감을 산출하기 위한 담론에는 남북한의 갈등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정권의 성향 등의 변수도 동시에 작용한다. 통일환경이 복잡하고 다변화될수록 대의(代議)에 의한 편승을 선택하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권리이며, 이를 조율하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통일담론은 권리는 있으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학계는 남남갈등과 이분법적 통일담론에 대해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으며,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달리지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개선을 지적해 오고 있다.

갈등은 발전의 순기능과 파괴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남남갈등’은 서로 자신의 가치관만을 배타적으로 강요하여 파괴를 재생산해 내는 역기능만 가지고 있다고도 본다.¹⁾ 진보와 보수 성향의 정부가 교차하면서 추진된 상이한 대북정책의 추진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 평화·통일의 ‘공공성’에 주목할 때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적·전략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쟁이므로 상호보완적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²⁾

이분화된 각각의 통일담론에 대한 합당한 논리적 이론과 근거는 충분하다. 이제는 정권의 성향이라는 변수에서 오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일담론을 정립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정치계의 통일전문가들이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에 대한 움직임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유속불식 무익어기(有粟不食無益於飢), 알고 있다면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자의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었다면 통일문제의 ‘공공성’의 명분 아래에 모여 심도 있는-때로는 거친, 그래서 불편한- 정반합(正反合)의 단계를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다듬어진 통일담론은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정영철(2018),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한국과 국제정치 34권 3호.

2) 홍석훈(2022),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남남갈등 쟁점 분석”,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8, No.1.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채수란(한국해양수산개발원)

I. 한국인의 통일공감대에 관한 대내외적 상황

1. 대내적 상황-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의식조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¹⁾ 한국인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필요하다 15.3%, 약간필요하다 28.6% 수준(전체 43%)으로 과반 이하. 2007년 처음 설문조사에서는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34.4%, 약간 필요하다 29.4% 응답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약 64%)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결과. 통일에 관해 기로에 선 인식변화는 큰 걱정거리.

2. 대외적 상황-북한의 적대국가 명시

남북한이 한민족인 것을 부정하고 양국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관계로 규정. 대내외 안팎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이 어려운 상황

II.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한국의 기본원칙 고수²⁾

1. 자유의 가치 확산에 기반한 원칙

자유는 인류가 가진 최고의 보편적 가치인만큼 현재까지 최고의 제도인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가치 확산이 필요. 자유민주주의도 약점과 단점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최고의 제도라 할 수 있어. 체제경쟁에서 이미 북한은 뒤처짐.

2. 한국의 주인의식 필요

지정학적 결정론 불식, 한미동맹에 지나친 의존하는 태도가 아닌, 우리가 주도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023 통일의식조사, 2023.

2)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제8회 해란 심포지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기조강연, 2024년 4월 19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와 정책 연구기관이 자유를 구현해 통일정책을 상세히 제시, 북한에서 한국드라마, 영화 등을 보고 있으므로 자유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함. 36,000명의 탈북자를 먼저 온 통일로 여기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 제공.

Ⅲ. 통일 미래 세대들과의 소통(기존 프로그램 적극 활용)

1. MZ 세대들의 통일의식 고취 방안 마련

-대학 중심: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MZ세대들의 통일의식 고취가 최우선. 통일 교육 콘텐츠 다양화 및 혁신을 통해 긍정적인 통일미래상 제시·확산- 일예로 관계부처의 SNS를 통한 MZ 세대들과의 소통 확대, 통일 뮤지컬, 통일 관련 대학생 토론배틀, 토크콘서트, 현장체험학습(DMZ생태공원, 오두산통일전망대.. 방문) 등 기존 통일선도대학(국민대 등) 프로그램 확산. 현재 통일부의 통일선도대학 장기 프로젝트로, 지속적 추진이 중요.

-고등교육: 고등학교 전교생으로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양교육으로 확대 추진 필요. 통일선도대학과 비슷한 형식으로 거점 고등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통일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하도록 시스템 마련. 고등학교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해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이 중요→가정과의 학습연계 필요

2.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교육인 양성 프로그램: 미래 지향적 통일관을 지닌 교사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마련(탈북민, 북학한과 졸업생 활용 등), 국사-국어-통일학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 현재 교원들에게도 평화통일 교육 실시를 통해 전문성 제고

3. 민간인 통일교육 활성화

-민간 통일교육 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민간이 참여·주도하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지역학교-지방부처-지역언론을 통한 확산 협조체계 강화

토론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이병훈(국립창원대학교)

- 통일 필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실천의지와 역량을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군사적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도록 할 수 있는 인식 개선 활동
 - 평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라운드테이블, 퍼실리테이션 etc.)
- 대학생, 지역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통합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기획적 방법론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각각의 집단들의 이해를 도모
- 문화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접근이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 실천적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북한지역의 콘텐츠,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자기주도적 학생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행사 및 체험활동을 통해 유도함
 - 음식문화를 활용한 통일교육 방법 프로그램
(북한지역의 음식문화에 대한 지역별 내용을 통해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소개하고 한 민족으로써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이해와 관심 유발)

- 지역문화를 활용한 통일교육 방법 프로그램
(북한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및 관습등 다양한 지역적 콘텐츠 기반의 이해와 개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유발)
-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학생중심의 통일 동아리 및 탈북민과 연계한 프로그램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연계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적 콘텐츠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 수준의 함양
 - 비교과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연계